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방안 (논의기구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검토)

2020. 2.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지원단

1. 검토 배경

■ 2019. 9. 26.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경과

- 2019. 9. 26. 개최된 제1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찬희 위원(대한변협 협회장)이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논의를 제안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의장인 대법원장께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음 회의까지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기초적인 보고를 할 것을 지시**
 -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보고 준비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에 기초보고

■ 2019. 12. 16.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논의 결과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필요성은 공감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논의기구¹⁾ 등의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

2.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준비모임

■ 준비모임 개요

- 준비모임 구성원

순번	성명	기수	비고
변호사회	배호길	연수원 33기	서울변회 법관평가위원회 간사
	김현호	연수원 30기	서울변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유정표	연수원 38기	서울변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김승현	변시 1회	서울변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1)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와 회의록에는 '준비기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논의기구'라고 함



법원	이한일	연수원 28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한종환	연수원 36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준비모임 일자

- 1차 모임 : 2020. 1. 21. 14:00, 법원행정처
- 2차 모임 : 2020. 2. 5. 14:00, 법원행정처

■ 준비모임에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기초로 아래 사항을 정리함

3. 논의기구의 연구·검토 범위

■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로 한정할 것인지,

「변호사 외 다른 재판 참여자 등에 의한 법관평가」까지 포함할 것인지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논의 경과

- ‘변호사에 의한 평가’ 외 학계, 국민 등으로 평가 주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여, 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 논의기구의 연구·검토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로 한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결과에 부합함 ⇨ 이하 이를 전제로 검토함

4. 논의기구의 구성 방식

1) 구성 방식(안)

■ [제1안]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 방식 []

-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대법원장)이 회부한 안건을 연구·검토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기구임(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 참조)
-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별도 TF를 구성하는 제2안에 비하여 보다 공식적인 성격을 지님

■ [제2안] 법원행정처 – 대한변협 공동 TF 방식 []



- 분과위원회 방식에 비하여 구성원 변경, 회의 일정 조정 등이 쉬움
 -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사명령이 필요하나, TF 구성원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서의 장이 선정함²⁾
 -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9조 제2항), TF는 그와 같은 회의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다만, 제2안 채택 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주체에 대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주체가 TF이고, TF의 구성주체는 법원행정처이므로, TF가 곧바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어색함

■ [제3안] 초기 TF ⇨ 추후 분과위원회 방식 []

- 초기에 “법원행정처 - 대한변협 공동 TF”를 구성하여 논의하다, 추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
 -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초기 TF에서 정리(☞ **쟁점발굴**)하고, 분과위원회는 개별 논의 사항에 관하여 압축적으로 논의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
- TF와 분과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TF 구성원에 대하여는 법원 내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보통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제3안 채택 시, 초기 TF 단계에서는 법관과 변호사로만 구성하여 변호사가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다가, 추후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가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상정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초기 TF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TF와 분과위원회의 논의가 중복될 위험성 있음

■ 검토 의견 : [제3안]

- TF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을 발굴한 다음, 분과위원회에서는 개별 쟁점 위주로 압축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수

2) 태스크포스팀 운영내규 참조



있는 장점이 있음

- TF와 분과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최대한 같게 하는 방법으로 논의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

2) TF 또는 분과위원회 방식에 의할 경우, 위원 구성 방안

■ 관련 규정

[TF 관련 규정]

태스크포스팀 운영내규

제4조 (구성)

- ① 목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TFT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주무부서의 장이 기획조정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② TFT는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법관·직원 중 목적 현안과 소관업무 사이의 관련성, 전문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법원행정처의 주무부서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에게 일부 팀원의 선발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코트넷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아 팀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
- ④ 팀장은 TFT 구성이 완료된 즉시, TFT의 목적 현안 및 TFT 팀원의 명단을 법원행정처 실·국장과 각 팀원 및 각 팀원이 소속한 기관의 기관장, 소속 재판부의 재판장 또는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에게 알려야 한다.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TF 또는 분과위원회 법관 위원

● 법원 내부 공개모집 절차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에 위원 추천 요청 여부

- 분과위원회 전례

- 재정·시설, 재판제도, 사법정책,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경우 법원 내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음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고, 법원 내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

- TF 전례

- 「법관인사제도 개선 연구반」(2019. 3.경),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2018. 11.경)의 경우 법원 내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 전례가 있음
- 그 외 TF의 경우, 통상 법원 내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음

- 검토 의견 : 법원 내부 공개모집 +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 등 추천

- 법원 내부 공개모집 절차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위원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함
- 다만, 논의 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구나 제3안과 같이 TF 후 분과위원회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TF 단계에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TF 또는 분과위원회 변호사 위원

- 대한변협을 통하여 추천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한편, 준비모임에서는 변호사 위원을 경인권, 지방권 변호사로 나누어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³⁾이 다수였음

3) 지방권 변호사회의의 경우 법관평가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가 적고, 법관평가 문항도 대부분 대한변협으로부터 전달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의 법관평가 문항을 사용한다고 함



■ 「변호사가 아닌 외부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고 함)의 포함 여부

- 논의 범위가 ‘변호사에 의한 평가’로 한정되었더라도,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에서, ‘변호사에 의한 평가’ 외 **학계, 국민 등으로 평가 주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논의 과정에서 법조계 외의 시각을 참고할 필요 있음
- 다만, 논의기구의 구성 방식으로 제3안(초기 TF ⇨ 추후 분과위원회)을 채택 시 초기 TF 단계에도 외부위원을 포함할지 여부 검토 필요
 - 초기 TF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을 발굴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법률가인 법관과 변호사만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임
 - 다만, 분과위원회 단계에서는 정리된 개별 쟁점에 관하여 논의하므로 법조계 외의 시각을 참고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외부위원의 구체적 모습
 - 법조계에 대한 이해 또는 관심이 있는 외부위원이 바람직함
 - 예시 : 법조출입 경력이 있는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 변호사⁴⁾ 등

■ TF 또는 분과위원회 구성원 수와 구성

- TF 또는 분과위원회의 법관과 변호사를 같은 수로 구성할지 여부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관과 변호사를 같은 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고, 다른 수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어느 한 그룹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 준비모임에서는 법관과 변호사가 반드시 같은 수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함
- 현재 활동 중인 분과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

4)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교수님을 ‘학계 0.5 / 시민단체 0.5’로 보아 구성한 전례 있음



순번	분과위원회	위원 수	위원 구성(특정 그룹이 과반인 경우 밑줄 표시)
1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14	법관 6인 + 법원공무원 4인 + 외부위원 4인
2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10	<u>법관 6인</u> + 변호사 2인 + 법원공무원 2인
3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13	<u>법관 7인</u> + 변호사 3인 + 법원공무원 1인 + 외부위원 2인
4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1	법관 2인 + 변호사 2인 ⁵⁾ + 검사 1인 + 국회 1인 + 학계 3.5인 + 외부위원(시민단체) 1.5인
5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	11	법관 2인 + <u>법원공무원 6인</u> + 외부위원 3인

● 각 방안에 따른 TF 구성 예시

-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다만, 논의기구를 TF로만 운영하기로 한다면, 아래 예시에 외부위원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함)
- 논의기구 구성 방식에 관하여 제3안(TF 후 분과위원회로의 전환)을 채택하는 경우, 논의할 사항의 정리를 위한 TF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하고, 추후 분과위원회로 전환 시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 같은 수로 구성하는 경우
 - 8명 : 법관 4명 + 변호사 4명
- 다른 수로 구성하는 경우
 - 7명 : 법관 4명 + 변호사 3명
 - 9명 : 법관 5명 + 변호사 4명

● 각 방안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예시

- 같은 수로 구성하는 경우
 - 10명 : 법관 4명 + 변호사 4명 + 외부위원 2명
 - 12명 : 법관 5명 + 변호사 5명 + 외부위원 2명
- 다른 수로 구성하는 경우
 - 9명 : 법관 4명 + 변호사 3명 + 외부위원 2명
 - 11명 : 법관 5명 + 변호사 4명 + 외부위원 2명

5) 경인권 변호사 1명, 지방권 변호사 1명



3) 분과위원회 방식에 의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성격

■ [제1안] 특별위원회(한시적 분과위원회)로 운영 []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한하여 연구·검토하고, 실제 법관평가 집행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경우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른 실제 법관평가 집행 업무 절차는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함
- 참고: 현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형태로 활동 중

■ [제2안] 상설 분과위원회로 운영 []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른 법관평가 실시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또는 분과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 상설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 ⇨ 상설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필요성 낮음

4) 분과위원회 방식에 의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명칭

■ [제1안]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 []

- ‘법관평가’는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명칭임
- 다만, ‘법관평가제도’라고 표현하는 경우, 근무평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연구·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오해될 소지 있음
- 특별위원회로 운영하는 경우, 추후 변호사 외 다른 재판참여자에 의한 평가가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별도의 분과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함

■ [제2안] ‘법관외부평가’ 특별위원회 []


- ‘법관외부평가 특별위원회’는 변호사에 의한 평가 외에 소송당사자 등 다른 평가자에 의한 법관평가도 연구·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추후 변호사 외 다른 재판참여자에 의한 평가를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특별위원회의 성격이 한시적 조직임을 감안하면, ‘법관외부평가 특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기에 부적절함

5. 논의기구의 연구 · 검토 사항 예시

1) 지방변호사회의 현행 법관평가에 관한 설명

- 사법행정자문회의 기초보고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과정(2019. 11. 시행)에
서 다음과 같이 현행 법관평가 개요 설명

■ 지방변호사회의 2018년 법관평가 개요

-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평가결과를 취합, 집계
- 전국회원 21,540명 중 4,091명(전국회원의 18.9% 참여)이 34,806건의 평가표 제출
- 법관평가는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나, 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됨
- 법관평가표는 상시 제출할 수 있으나, 주로 연말에 집중하여 제출됨
- 법관평가표에 평가자의 등록번호 외에 사건번호와 평가 대상(법원, 재판부, 법관명)을 기재함
- 평가자가 법관평가 대상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함
- 법관평가표는 해당 사건이 종국되기 전에도 제출이 가능함 (해당 사건 종국 전 법관평가표를
제출하여 판결문에 관한 세부 문항에 답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세부 문항에 대하여는 나머지
문항에 부여한 점수의 평균 점수가 부여됨)
- 평가항목  별도 첨부파일 「2018년 법관평가표」 참조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
항목과 10개의 세부 문항)
-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으로 배점
- 개별 법관에 대하여 변호사 5인 이상이 평가하는 경우에만 유효평가대상 법관으로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변호사회 관할 법원장에 송부하고, 언론
에는 우수법관 공개

■ 별도 첨부파일 : 「2018년 법관평가표」

- 준비모임에서는, 현행 법관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우려하는 의견 중 일부
는 지방변호사회의 현행 법관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 법관평가에 대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규정, 실무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 법관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변호사회의 현재 법관평가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선택 가능)는 다음과 같았음 ⇨ 아래 항목에 관한 설명이 더욱 필요함

- [비공개 결정으로 삭제]
-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견이 많은 순서)
 - 참여하는 변호사의 비율이 낮음(56.28%)
 - 소송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33.62%)
 - 법관평가표 제출이 의무가 아니어서, 부정적인 내용의 평가표만 제출될 가능성 있음(19.83%)
 - 변호사 5인 이상의 평가표만 수집되면 유효한 평가로 판단하는 부분(19.46%)

2)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은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음 ⇨ 검토 사항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하의 검토 사항 전반(평가 항목, 평가결과 전달 여부, 이의·불복 절차 필요 여부 등)과 연관되어 있음

- 만약 변호사평가 결과를 법관의 근무평정이나 연임심사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근무평정이나 연임심사 방식에 대한 간략한 기초보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에 따라, 개별 법관평가표 등 기초 데이터[raw data]를 변호사회로부터 전달받을 필요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정 가능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예시는 다음과 같음

- ① 법관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되돌아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
- ② 근무평정 반영
 - 필수적 반영 방안
 - 반영 여부는 평정권자 재량에 맡기는 방안



- ③ 근무평정 외 반영

- 연임심사 반영
- 선발성 인사 반영
- 심각한 사항에 대한 개별적 조치

3)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주관 기관

-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를 오랜 기간 시행하여 왔음
⇒ 법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등 주관 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과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주관 기관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에 활용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과 절차로 진행할 필요성 높아짐

4)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항목 (법관평가표 관련)

- 상정 가능한 세부 연구·검토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① 항목별 점수화 평가 방식의 유지 여부
 - 적격/부적격 여부와 부적격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는 평가 방식으로의 변경 여부 등
- ② 재판유형별 법관평가표의 구분 여부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법관평가표를 다르게 할 것인지 여부
- ③ (지방변호사회 마다 법관평가표가 다른 경우) 법관평가표의 전국적 통일 여부
- ④ 현행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
 - 개별 문항의 보완, 개선
 - 점수화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문항별 배점의 적정성 등



5)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결과의 해당 법관 전달 여부

■ 상정 가능한 전달 여부에 관한 방안 예시는 다음과 같음

- ① 해당 법관에게 매년 전달, ② 희망하는 법관에게 전달, ③ 하위법관으로 2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에게 전달, ④ 해당 법관에게 전달하지 아니함 등

■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에 따른 전달 여부 검토

- 법관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되돌아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관에게의 전달이 필요함
-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법관에게 전달할 필요성 높아짐 (이의·불복 절차 등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음)

6)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불복 절차

■ 이의·불복 절차의 필요성

- 준비모임에서는 변호사평가 결과를 여러 평정자료 중 하나로만 활용한다면 이의·불복 절차의 필요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이의·불복 절차를 위해서는 개별 법관평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 불복 절차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이의·불복 절차를 두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

- 이의·불복을 할 기관, 이의·불복의 구체적인 절차

7)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 평가결과의 공개 필요성

-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에 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는 인사자료가 되므로,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 기초 통계자료 :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 전체 평가표의 수, 평가받은 법관의 수, 평가받은 법관의 평균점수 등 공개 여부



- 법관 명단과 사례 :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명단, 사례 등 공개 여부

6. 법원행정처 내 주무부서와 향후 일정 계획(안)

가. 법원행정처 내 주무부서

■ 고려 요소

- 논의기구의 연구·검토 주제는 사법정책 또는 법관인사와 관련된 측면이 있음
- 대외기관인 변호사단체와 협업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까지의 실무는 주로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여 왔음

■ 검토 의견

-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과 같이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나. 향후 일정

- 2020. 4. 9.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기초보고 ⇨ 논의기구 구성 방식 검토
- 2020. 4. 중 분과위원회 또는 TF 구성 절차 진행
- 2020. 5. ~ 분과위원회의 또는 TF 연구·검토
- 2020. 5.~6. (TF 후 분과위원회 전환 방안 채택 시) 분과위원회 설치
- 2020. 6. 11.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중간보고
- 2020. 9. 10.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최종보고